

중국의 대(對) 약소국외교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 ‘일대일로’: 신국제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교합*

서정경**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학술연구교수

본 연구는 2013년 출범한 중국의 ‘일대일로’를 서방 중심 주류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하고 신국제질서 추구하고 긴밀히 연관돼 온 중국의 대(對) 약소국외교의 장기역사적 맥락을 추적한다. 이를 위해 유교사상의 영향 하에서 중국 외교에 도덕, 권력, 인정을 중시하는 ‘도덕정치’가 줄곧 투영된다고 가정하고, 건국 초부터 일대일로 출범 이전까지의 중국의 대(對) 약소국 외교를 주류질서에의 도전시기-순응시기-긴장시기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리하여 중국의 대(對) 약소국외교에 내재해온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교묘한 교합 및 시기별 변화를 해석하고, 도덕외교의 주요 사례로 등장한 ‘일대일로’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주제어 일대일로, 도덕정치, 대(對) 약소국외교, 중국의 신국제질서 추구,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교합

I. 서론

일대일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라는 국제질서의 전환 시기에 등장하였다. 일대일로의 목적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일대일로의 중국적 목적은 2050년까지 최강대국 지위에 등극하려는 중국이 2차세계대전 이후의 미국과 서방 중심의 현 국제질서를 자신이 유력한 일극이 되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Amar et al., 2019; Li, 2021; McBride et al., 2023). 이를 위해 중국은 국제사회의 주류세력인 패권국 및 선진국과 구별되는 상대적 약소국들(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도국, 빈국, 최빈국 등)

* 이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6078081). 2023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jksnu@snu.ac.kr

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그들과의 5통 — 정책소통(政策溝通)·인프라연통(設施聯通)·무역창통(貿易暢通)·자금융통(資金融通)·민심상통(民心相通) — 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산업적·문화적 연계는 물론, 군사안보 분야의 연계 까지도 추구하고 있다.¹

이는 건국 이전 중국공산당이 당시 주류세력이었던 자본가와 지주를 타파하기 위하여 수적으로 많은 가난한 농민들과 연대했던 사실을 상기시킨다. 건국이후에도 중국은 서구열강들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는 이른바 ‘피압박민족’ 및 혁명세력들과 연대하는 통일전선전략을 취했다. 이후에도 중국은 줄곧 자신을 개도국의 일원이자 리더로 상정하였고, 개도국외교를 자국 “외교의 기반(發展中國家是基礎)”으로 상정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국제사회의 비주류 세력이자 상대적 약자들에게 다양한 원조와 정치적 지지를 제공해 왔다. 오늘날 ‘글로벌 사우스’를 둘러싼 서방과의 경쟁구도 속에서도 중국은 자신이 줄곧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었다고 강조한다.²

중국은 왜 그렇게 약자들에게 집중하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중국의 약소국외교의 특성을 자국 중심적 신국제질서를 건설해 나아가려는 중국의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동기 속에서 조망한다. 내전을 갓 종식하고 매우 가난했던 건국 초기에도 마오쩌둥(毛澤東, 이하 마오)을 비롯한 중국 지도층들은 아편전쟁 이후 굴욕의 세기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중국을 “강대국(중국 용어로 大國)”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진리군, 2012: 65-67). 비록 건국 초 현격한 국력 차와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당시의 구상은 현실과 거리가 있었지만, 중국의 역대 지도부는 소위 부도덕한 강대국들이 독점하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국제질서를 교정하려는 동기와 수사(rhetoric)를 명시적으로 종종 표명해 왔다. 국제사회의 비주류이자 상대적 약자 — 이른바 ‘피압박민족’을 비롯한 빈국, 개도국, 제3세계, 신

¹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중국 첫 해외 군사기지 설립은 일대일로가 안보영역도 포괄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보고서는 수원국이 중국의 대출을 받아 기반시설을 지은 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중국이 항구를 군사기지로 전환함으로써, 일대일로를 군사력 증강의 토대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수호재단, “지도로 본 중국의 글로벌 군사 족적 확대”, 2023. 9. 2.

² 서구의 개념인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중국의 수용과정에 대한 분석은 원동욱(2024) 참조.

홍국 등과의 연대를 줄곧 표방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대외원조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지지를 제공해 왔다.

본 연구는 중국이 그러한 과정에서 줄곧 자신이 인류운명의 진보에 기여하며 역사의 옳은 편에 서 있다는 도덕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이상주의적 수사를 양산해 왔음을 주목한다. 혁명시기 중국은 '피압박민족'의 편에 선 반(反)제국주의와 반(反)식민주의, 그리고 크기와 무관하게 평등한 사회주의 형제국 간의 연대를 표방한 '사회주의 국제주의'의 도덕적 이상과 신념, 아울러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평화공존5원칙' 등을 제시했다. 문화대혁명의 재앙적 결과로 당의 통치정당성이 위협받게 되자 서방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과감한 변신 속에서도 "인류에 대한 더 큰 기여"라는 도덕적 명분 제시를 잊지 않았다. 이후 천안문사태 및 소련 붕괴 이후 서구의 '중국위협론'에 당면하자 유가사상(儒家思想)을 중심으로 한 전통의 재발견 사조 속에서 서구식 냉전적 멘탈 및 경험과는 구분되는 자국의 도덕적 이상과 실천, 그리고 그에 기반한 조화(和諧)롭고 공정(公正)한 신국제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관련된 다양한 수사 — '평화부상(和平崛起)', '친·성·혜·용(親·誠·惠·容)', '조화세계[和諧世界]', '인류운명공동체' 등을 제시해 왔다.³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을 돕고 세상을 더욱 공정하고 조화롭게 만든다는 미명하에 대외원조 및 다자외교도 활발히 진행해 왔다. '일대일로'는 바로 이러한 중국의 약자들에 대한 장기적 외교행태와 수사를 계승하여 시진핑 시기에 탄생한 그랜드 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일대일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자들에 대한 중국 외교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본 연구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본래 서로 엄밀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계돼 있는 것처럼, 유난히 자신의 도덕적 면모를 강조하며 약자들을 지원해 온 중국의 도덕적 이상주의 역시 현실주의와 교합돼 왔다고 상정한다. 이는 인간의 선한 품성에 기초하여 인류에게

³ 학계에서는 자오팅양(趙汀陽)의 '천하체계론', 옌쉐통(閻學通)의 '도덕적 현실주의', 그리고 친야칭(秦亞慶)의 '중국특색의 국제정치이론' 정립 시도 등이 있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하는 서방 국제정치학계의 이상주의(idealism)와 그를 이은 자유주의(liberalism) 국제질서가 사실상 보편성을 가장하여 강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실상 대단히 “현실주의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문제해결이론(problem solving theory)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⁴ 서방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의 부도덕성을 줄곧 지적하며 때로는 강렬한 혁명적 방식으로 저항하고, 때로는 타협했으며, 오늘날 강대국외교를 추동하며 기존 국제질서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도덕적 이상주의는 역사적으로 현실주의와 어떻게 긴밀히 교합되었으며 이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그것은 브렉시트(Brexit),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우리가 목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락시기 일대일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상상력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는 중국의 약소국 외교의 장기적 흐름을 중국의 국제질서의 변혁 추동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이를 위해 분석 시기를 첫째, 건국 이후 중국이 과격한 혁명의 방식으로 당시 주류 국가 미국과 소련이 이끄는 각각의 질서에 도전했던 시기, 둘째,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미국 중심 주류 질서에 순응했던 시기, 셋째, 탈냉전 이후 주류질서로부터의 견제 속에서 자국 중심 신질서를 탐색하는 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 중국의 약소국외교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교합 및 그 변화를 규명하고, 그것이 일대일로에 갖는 비판적 함의를 도출한다. 상당히 넓은 시기를 다뤄야 하기에 지면 제약으로 인해 약소국 외교의 상징적 이슈 및 거시적 변화의 해석에 주력하며, 일대일로 출범 이전까지를 주로 분석한다. 그리하여 중국적으로는 중국의 신국제질서 모색에 배태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들여다보며, 일대일로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⁴ 19세기 영국 패권(Pax Britannica)을 계승한 20세기 미국 패권(Pax Americana)이 서방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해 오는 가운데 ‘민주주의’, ‘인권’, ‘시장’ 등이 국제사회의 주류적 가치이자 규범으로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이상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의 비판 및 관련 논쟁이 불거진 바 있으며 이것이 국제정치학계의 제1차 대논쟁의 핵심이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국외교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교합: 중국의 '도덕정치'

국제관계학에서 언급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개념은 서구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1차세계대전 이후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기반한 이상주의적 세계관은 19세기 대영제국의 눈부신 역사와 평화를 재연하려는 유럽인들의 희망을 반영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부상과 함께 국제사회를 재편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관은 인권, 민주주의, 시장 등 소위 보편적 가치의 뒷받침 속에서 신자유주의로 계승되었다. 주권국 간의 자유로운 교역이 상호 의존을 심화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는 '복합의존론'은 지구주의(globalization)를 뒷받침한 이상주의적 표출이었다.

이러한 이상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이데올로기는 그러나 사실상 영국 패권을 계승한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서방 선진국 즉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한다. 기존 질서와 이익구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문제해결이론'에 해당하며 사실상 매우 현실적이다(Babik, 2013). 따라서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

이상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의 비판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설득력 있는 부분은 바로 국제정치에서 흔히 주장되는 추상적 원칙들의 현실적 배경을 들춰내는 것이다...(중간 생략)...중요한 것은 이들 원칙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시점에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한 국가이익에 기반한 국가정책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한데 불과하다는 사실이다(카아 지음, 김태현 옮김, 2000: 114).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중국 외교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고 상정한다. 양자는 갈등적 구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긴밀히 연계되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부터 개혁개방의 장기 과정상의 중국을 국제사회의 기득세력으로 분류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국력의 성장 이후 "차이메리카(CHIMERICA)"로 불릴 만큼 신자유주의 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중국은 이미 기득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중국은 건국

초부터 지금까지 줄곧 주류 국제질서의 불공정성과 불평등성을 줄곧 지적했고, 이를 교정하려는 외교적 수사와 행태를 자국의 약소국외교에 반영해 왔다. 본 연구는 여기에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교묘한 교합이 내재해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외교의 ‘도덕정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루시안 파이(Pyre, 1985)에 따르면 자고이래로 중국에서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로 간주되었고, 그러한 자들이 권력을 갖는 것이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일반대중에게 주입되었다. 본 연구의 ‘도덕정치’ 개념은 유교사상의 영향 하에서 ‘도덕’적으로 ‘인정’받을수록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러한 전통관념을 전제한 것으로서, 중국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도덕성 인정을 통해 권력을 포함한 자기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정치적 패턴을 뜻한다. 이는 ‘도덕과 권력 간 긴밀한 상관성’을 상정하며, 따라서 도덕의 수단화, 또는 도덕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중국의 정치와 외교를 전통 유교와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한 기존 연구들이 있다. 연쉐통(嚴學通, 2014, 2015)은 ‘도덕적 현실주의(Moral Realism)’를 제시하여 부상국(중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설사 패권국(미국)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만일 국제사회가 패권국보다도 부상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더욱 인정한다면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정치학계의 주류이론인 현실주의에 ‘도덕’이라는 중국의 전통 관념을 끌어와 새로운 현실주의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반향을 일으켰다.⁵ 또한 국제정치학이 서구의 역사에만 치중돼 있다는 성찰 속에서 비서방의 경험을 녹여 내려는 지구적 국제관계이론(IRT: 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비서방의 연구성과로 꼽혔다 (Amitav and Buzan, 2010; Amitav, 2019).

그러나 그의 관점은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한정돼 있어 중국외교 내부에 배어 있는 이상주의를 발견하지 못한다. 또한 패권국과 부상국 간 세력전이를 다

⁵ 그는 공세적 현실주의자인 미어샤이머(John Joseph Mearsheimer)와 공개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논쟁을 전개하였고, 도덕과 국가 외교와의 긍정적 관계를 적극 옹호하였다. John Mearsheimer vs. Yan Xuetong: Can China rise peacefully? <https://www.youtube.com/watch?v=xokkGnBOgiU>(검색일: 2023. 9. 20.).

루는 이론으로서 과거 국력이 약한 시기 중국 외교에 대한 설명력은 제한된다. 이에 비해 대만학자 스즈위(Shih, 1993)는 규범인지론(normative cognitive) 관점에서 '자신의 도덕적 역할과 상대의 그에 맞는 역할에 대한 기대'라는 틀을 가지고 건국 이후 1980년대까지 중국 양자외교를 분석하였다. 그는 춘추전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유교의 도덕관념이 현대 중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파이의 견해를 계승했다. 또한 유교사상이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뿐 아니라,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까지 밀접히 연관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국이 자신은 국제질서를 더욱 공정하게 교정하는 정의로운 세력으로 인정받는 데 상당히 치중했으며, 이런 집착이 때로는 중국외교를 비현실적으로 만들었기에 현실주의만으로는 중국의 심리와 행태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는 중국 외교의 도덕성(morality)라는 매우 중요한 변수를 부각시켰다는 공헌이 있다. 하지만 중국의 비현실성을 주로 드러내는 데 그쳤으며, 더욱이 1980년대까지의 연구이므로 탈냉전 이후 중국 외교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중국외교의 '도덕정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건국 이후 일대일로를 제시하기 이전 시기의 중국의 약소국 외교 분석에 적용한다. 그리하여 중국 외교에 배어 있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교묘한 공존을 드러내고, 그것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한다.

2. 국제질서 변혁과 연관된 '대국(大國)'과 '소국(小國)' 개념

중국에서 “대국(大國, Dagu)” 개념은 세계를 제패한 ‘패권국’ 또는 ‘초강대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강대국’을 포괄하는 의미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 등 패권국들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총 9개 강대국들의 부상을 심도 있게 분석한 중국관영 CCTV의 한 다큐멘터리 제목이 “대국굴기(大國崛起, Dagu juqi)”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서정경·원동욱, 2019).

그런데 중국 관방(官放)과 학계에서 ‘대국(大國)’ 개념이 비교적 가치중립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이라면 “강국(強國, Qiang guo)”이나 “패권(霸權, Baquan)” 개념은 부정적 의미를 가진다. ‘강국’은 종종 중국어의 ‘강권정치(強權政治, Qiangquan

zhengzhi)’ 또는 ‘패권주의(霸權主義, Baquan zhuyi)’와 연결된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百圖) 백과사전에서 ‘강권정치’는 “강권적 관계를 가지고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자산계급의 국제정치”⁶로, ‘패권주의’는 “대국, 강국, 부국이 소국, 약국, 빈국을 기만, 압박, 지배, 간섭 및 전복시키려 하고, 타국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강제적으로 통제 및 통치하는 것”⁷으로 해석돼 있다.

또한 바이두 백과사전의 ‘신국제질서(國際新秩序)’ 설명 부분에서는 기존 국제질서(國際舊秩序)에 대해 “광대한 개도국들이 권력이 없을 때 소수의 대국들이 선진국의 바람과 이해관계에 따라 건립한 것으로, 전후(세계대전 종식 이후) 현재까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기존국제질서의 특징은 패권주의, 강권정치, 그리고 착취와 약탈이다.”⁸라고 풀이돼 있다. 그러므로 구질서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어야 하며, 중국은 항상 신국제질서를 주장해 왔다고 적혀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의미를 담은 개념은 중국의 학계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中國人民外交學會, 2016). 즉 중국에서 ‘대국’과 ‘소국’ 개념은 국제사회가 패권국 및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제질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치적 의식과 밀접하게 조응한다. 따라서 소국, 약국, 빈국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대국, 강국, 부국의 횡포를 제어해야 한다는 당위와 맞닿아 있다. 중국관방과 학계는 줄곧 중국이 늘 국제사회의 약자들의 편에 서 왔으며 세계는 다극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비주류세력이자 약자들에 대하여 중국은 시기별로 자기식 용어 즉 ‘피압박민족’, ‘중간지대’, ‘두 개의 중간지대’, ‘제3세계’, ‘개도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호칭해 왔다.

⁶ 원문은 “強權政治是指一種以強權關係維持國際秩序的資產階級國際政治”, https://baike.baidu.com/item/%E5%BC%BA%E6%9D%83%E6%94%BF%E6%B2%BB/2134095?fr=ge_ala(검색일: 2024. 7. 15.).

⁷ 원문은 “霸權主義(hegemonism)是指大國、強國、富國欺侮、壓迫、支配、干涉和顛覆小國、弱國、窮國，不尊重他國的獨立和主權，進行強行的控制和統治”, https://baike.baidu.com/item/%E9%9C%B8%E6%9D%83%E4%B8%BB%E4%B9%89?fromModule=lemma_search-box(검색일: 2024. 7. 15.).

⁸ 원문은 https://baike.baidu.com/item/%E5%9B%BD%E9%99%85%E6%96%B0%E7%A7%A9%E5%BA%8F?fromModule=lemma_search-box(검색일: 2024. 7. 15.).

III. 주류질서에서의 도전 시기:

국가로 서기 위한 투쟁 및 비주류와의 연대

1. 반동회의의 참석과 대외원조: 미국의 반중(反中)진영에의 대처

반동회의(Asian-African Conference)의 주요 정신이 '비동맹주의'라는 점에서 중소동맹 황금기였던 당시 중국은 반동회의의 참석에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저둥(毛澤東, 이하 마오)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이하 저우) 등 지도부는 '반식민주의', '민족주의', '반제국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혁명이 중화인민공화국 출범에 원동력이었음을 강조하며 제3세계의 반식민주의 투쟁에 적극 찬동했고(김태균, 2023: 119-120), 반동회의의 주역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1954년 중국이 인도와의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평화공존5원칙' —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 — 이 반동회의의 핵심 결과물인 '반동10원칙'의 골자를 이루게 되면서, 중국은 미소 냉전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새로운 국제관계 규범을 제시한 나라가 되었다.⁹

이를 위해 중국은 미소 대립 아래 사회주의 국가들 간 끈끈한 유대관계를 주창한 사회주의 국제주의 노선 및 국제통일전선을 '평화공존5원칙'이라는 새로운 원칙 제시를 통해 '국제평화통일전선'으로 탈바꿈시켰다. 중국은 왜 반동회의에 주목했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 동기는 신생국가로서 생존하기 위한 국제 안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특히 미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외교적 승인을 얻고 우군을 만들기 위함이었다(Yu, 1977: 102). 중국이 '평화공존5원칙'을 미국 주도 군사동맹체제 편입을 거부한 인도 네루와 버마(현 미얀마) 우누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확립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⁹ 10가지 원칙은 첫째, 인권 존중 및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존중, 둘째, 모든 국가의 주권 및 영토통합 존중, 셋째, 모든 인종과 민족의 동등성 존중, 넷째, 내정불간섭, 다섯째, 단독 혹은 집단적 자위권 존중, 여섯째,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위한 집단 방위협정 사용 금지, 일곱째, 침략, 침략 위협, 병력 사용 금지, 여덟 번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아홉 번째, 상호이익과 협력증진, 열 번째, 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이다.

수 있다. 내전 승리 이후 중국 전역의 약 6억 명의 인민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해 가는 만만찮은 과업을 수행하는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위협한 나라였다. 미국이 국공내전 말기부터 중국공산당을 압박했고, 건국 이후에도 대만을 지지하며 중국의 국가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쟁을 통해 격렬하게 부딪힌 핵보유국 미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체결 외에도 영국,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태국과 반공군사동맹(SEATO)을 구축하며 중국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에 중국은 소련과의 동맹을 통해 사회주의진영에 안착한 동시에¹⁰ 건국 이전부터 포착한 미소 양 진영 사이의 ‘중간지대’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중간지대론’적 세계관 — 세계에는 두 개의 진영(사회주의/민주주의)이 있고, 세 종류(제국주의·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국가가 있다(毛澤東選集 第4卷, 1946: 1193) — 에 기반하여 중국은 미소 양 진영 사이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중간지대 세력들이 모이는 반동회의에 주목했다. 서구 식민지로부터의 독립 및 식민 잔재 탈피 투쟁을 전개하는 다수의 약소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비동맹과 평화 등의 주제를 논의함으로써 미소 양대진영을 흔드는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는 자리를 중국이 포착한 것이다.

초대된 29개국 중에는 이미 미국 및 서방국가들과 긴밀한 군사적·경제적 협력관계의 6개국도 있었다. 회의 전 중국이 마련한 참석방안에는 “미국은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하는 추종국들을 통해 이번 회의를 파괴하려 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는 중국과 베트남 민주공화국뿐 아니라 많은 ‘평화 중립주의’ 국가와 ‘평화 중립주의’ 염원국들이 참석한다. 대다수 국가들은 평화, 독립, 자국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갈망한다. ... 이러한 상황에 따라 우리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총괄적 방침으로서 세계평화통일전선을 확대하고 민족독립 운동을 촉진하며 중국과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中國外交部, 1955). 즉 참석국들과의 관계를 개

¹⁰ 1954년 7월 소련 방문 시 저우는 미국 주도 반공체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두 달 만에 흐루시초프와 국방부장관은 복경을 담보했다. 미국 중심 8개국 반공군사동맹(SEATO)이 결성된 다음달에 중국은 중소 공동선언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군사블록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미 의회는 대만방위를 위한 지원 증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선시킴으로써 그들이 미국 편에 서지 못하도록, 또한 이미 미국 주도 안보진영에 참여한 국가들의 공격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처한 것이었다. 반동회의의 어젠다 중 하나가 '강대국에게 핵군축 등 군비축소 요구'였는데 중국은 사실상 이미 그때 핵무기 개발 결심을 내리고 비밀리에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반동회의의 참석의 또 다른 현실주의적 면모를 드러낸다. 반동회의의 기간 동안 양안위기는 일촉즉발이었고, 중국은 회의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반동회의의 최종 커뮤니케이션 '세계평화와 협력 촉진에 대한 공동 선언(Declaration on Promotion of World Peace and Cooperation)'에 중국이 만족할 만한 내용 —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위한 집단방위협정 사용 금지', '유엔헌장에 준거하여 모든 국제분쟁을 분쟁당사국의 평화적 방법과 협상 조정, 중재 및 법적 조치를 통한 해결'이 삽입되었다. 폐막 직후 저우는 양안위기에 대한 평화적 대응 입장을 천명하며 미국과의 무력충돌을 우회했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정치적 목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원조는 저우가 직접 관여하고 당중앙과 국무원이 총괄하며, 중앙정부가 관련 부서에 직접 하달하는 상명하복 체계였는데, 1952년 8월에 설립된 대외무역부가 대외원조를 일괄 관리하다가 1954년에는 '대외무역부'와 '국가계획위원회'로 업무분장되었다. 전자는 대외 담판과 계약체결을 담당하고 각 수출입 회사를 통해 물자원조를 시행했고, 후자는 업무에 따라 국무원 산하 관련 부서에 임무를 하달하였다(주홍, 2015: 28).

반동회의 이후 중국은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들, 그리고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상호 답방 및 대화를 가졌다. 마오는 '국가는 크기와 무관하게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며 형제처럼 서로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입장을 반복 천명했을 뿐 아니라, 상대국의 경제성장과 자력갱생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원조를 제공하며 많은 이들의 호감을 샀다. 반동회의 이전에는 원래 당대당 관계가 밀접한 베트남과 북한의 전후 철도, 도로, 항구 복구를 원조하는 정도였지만, 회의 이후 대상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당시 아랍연방의 리더이자 공산당운동의 핵심국인 이집트가 당시 면화생산 폭증으로 곤경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되자 자신이 면화 생산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산 면화를 대량 사들이며 호감을 샀

고, 결국 이집트는 중국 최초의 아프리카 수교국이 된다. 이와 같은 대외원조 및 정치적 관계를 통해 중국은 양국 간 상호불가침 및 상대국을 견제하는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거나, 대만문제, 중국의 유엔 가입문제에 대한 지지를 얻는 등, 다양한 정치적 성과를 얻어 냈다.

이는 중국이 자국 경제상황이 녹록치 못한 상황에서도 피압박 민족의 투쟁을 돕는다는 이타적이고 이상적 모습을 발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반패권주의’,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 외에도 ‘국가의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나라들은 평등하다’고 주장했고, 무엇보다 역사적인 ‘평화공존5원칙’을 주도했다. 이는 중국이 당시 미소 세력분점의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새로운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2차대전 이후 강대국 간에 형성된 일방적인 대립구도에 균열을 내고 제3세계 공간 창출에 기여한 나라가 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때 중국이 자신이 당면한 안보위협을 미국과 중간지대론 인민들 간의 것으로 ‘환치’시키면서, 즉 인민들의 안보를 대가로 자신의 안보이익을 도모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국이 소련을 침공하려면 전략적으로 반드시 먼저 중간지대를 탈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제 주요모순은 미제국주의와 중간지대의 국가, 인민 사이에 존재한다는 논리를 고안한 것이었다(射益顯, 1995: 36). 1954년 7월 저우가 중공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평화공존5원칙’을 보고하자 마오는 “미국의 최대 목적은 여전히 이 중간지대, 즉 일본부터 영국까지 장악하는 것이다. 미국은 반공 깃발을 이용하여 동맹국들을 점령한다. 특히 동방에서 일본, 필리핀, 파키스탄, 태국 등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점령되었다.”라며 전폭 지지한 사실이 그를 방증한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9: 333-334). 즉 중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서서히 형성된 미소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당면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계의 모순을 ‘미소 간 모순’이 아니라 ‘미국 vs 광대한 중간지대론 인민들과의 모순’이라 주장하고, 자신은 그러한 중간지대론을 돕는 정의로운 자로 설정했다. 또한 중간지대와 미국 간 투쟁이야말로 세계정치의 미래를 좌우한다면 반식민지, 식민지국가의 인민이 독립과 민주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와 주구에 맞서 싸워 이긴 중화인민공화국의 길을 걸어야 하기에, 자신의 국공내전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세계사적 위상을 가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는 대단히 자기중심적 사고로서, 전통 중화질서

의 특징인 자기중심성이 근대 이후에도 재발현된 사례로 해석 가능하다(이병한, 2019).

2. '혁명수출' 및 대외원조 정책의 격상: '이타적 원조' vs '위험의 외주화'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20차 전당대회 연설에서 흐루쇼프(Nikita Sergeyevich Khrushchev)가 자본주의 국가와의 평화공존 노선을 제시한 이후 중국은 소련의 비도덕성을 부각하기 시작했다. 사실 마오를 당황시킨 것은 흐루쇼프가 연설에서 스탈린의 잔혹성, 많은 이들의 죽음에 관련된 테러, 개인숭배,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원칙으로부터의 이탈 등을 폭로한 것이었다. 즉 스탈린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소련공산당뿐 아니라 다른 공산당의 권위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고, 특히 마오는 많은 부분에서 같은 내용으로 비판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윌한, 2023: 552-556).

흐루쇼프의 연설에 이어 공산당정권을 전복하려는 폴란드와 헝가리 노동자들의 시위, 집단화와 경제계획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불만과 사회경제적 불안 등에 대면하여 마오는 소련의 비도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수치심을 주기 시작했다(Shih, 1993). 폴란드와 헝가리 시위에 소련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자 '평화공존5원칙'을 소련 견제에 사용한 것이다. "소련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를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기를 바란다. 이들 국가의 독립과 자주를 허용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 간에도 평화공존5원칙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師哲, 1991: 558-559). 이러한 원칙이 동유럽 지식인들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되는 등 소련 중심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 중소 간 경합구도가 형성된다. 소련의 중국 '쌍백운동(雙百運動)'과 '반우파운동(反右派運動)' 비판, 쿠바 미사일사태 등을 겪으며 중소관계는 더욱 긴장되어 갔다. 1962년 10월 저우는 마침내 "맑스 레닌주의의 진리, 세계혁명의 중심은 모스크바에서 베이징으로 넘어왔다"고 선언하며 "인을 행함에 있어서는 스승일지라도 양보하지 않으며[當仁不讓]", "정의로운 일을 보면 용감하게 뛰어들다(見義勇爲)"는 『논어』 구절을 인용하였다. 저우는 또한 1963년 말 1964년 초 아프리카를 세 번이나 순방하며 탈식민 국가들에게 혁명을 호소하고, 개도국 세계에서 공산주의 운동 방향과 관련하여 소련에 공개적으로 도전하

였다.

이 시기 1960년부터 원조업무를 관리해 온 대외경제총국이 1964년 대외경제위원회로 격상되면서 대외원조가 더욱 체계화된다. 저우는 아프리카에서 중국 대외원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의로운 ‘5개 입장’ 및 ‘중국 대외경제 기술원조 8항 원칙’을 제시했다. 전자는 ‘평등 호혜, 내정불간섭, 수원국 자력갱생 도움, 수원국 부담 경감, 약속한 원조 의무 엄격 이행’이었고, 후자는 ‘평등 호혜’, ‘수원국 주권 존중, 부가조건이나 특권 불요구’, ‘수원국 부담 줄이기’, ‘수원국의 자력갱생 돕기’, ‘적은 투자로 빠른 성과 창출’, ‘중국이 생산한 최상품 설비와 물자제공’, ‘기술원조 제공’, ‘수원국 파견 중국인 전문가 특별대우 불요구’였다. 이때 두 가지의 첫 번째 원칙이 동일하게 “평등 호혜”, 즉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이익의 전제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 소련에 동시 저항하는 데 필요한 우군을 형성하고 안보를 보장받고 싶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콩고, 가나, 말리, 케냐, 탄자니아에 총 약 1억 2,000만 달러의 원조뿐 아니라, 앙골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필리핀, 로디지아(현재의 짐바브웨), 태국, 우간다, 베트남의 혁명투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Corrêa, 2019: 532).

매우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면모 같으나 저우가 아프리카 방문을 마치고 제출한 ‘아프리카 방문 보고서’에는 미국과 소련을 동시 대적하는 중국의 현실적 의도가 드러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원조는 우리와 제국주의 및 수정주의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를 쟁탈한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군사장비를 제공하여 아프리카 국가의 군대를 통제하고 있다”(주홍, 2015: 167, 171).

소련과의 도덕성 경쟁이 가장 두드러지게 발현된 사례가 바로 오늘날까지도 중국 역사상 최대의 대외원조 사례로 꼽히는 타자라(TAZARA: Tanzania-Zambia Railway Authority) 철도 건설 원조다. 사회주의 세력이 포진한 아프리카에서 중국은 소련이 아닌 자신이 진정한 사회주의의 실천자이자 담지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분투했다. 1965년 1월 5일 인민일보 사설에 “세계혁명과 인류진보, 세계평화의 위대한 사업을 위해 보다 많고 보다 큰 공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렸는데, 이는 대외업무 관련하여 중국공산당 기관지에 처음으로 ‘세계혁명’이 언급된

것이였다. 9월 3일 『인민일보』에 실린 린뱌오(林彪)의 “인민전쟁 승리 만세”에는 “모든 혁명사업은 결국 세계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인민혁명 투쟁으로 전이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마땅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인민혁명 투쟁을 지지하며 자기의 공산주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돼 있다(謝益顯, 1995: 78). 이처럼 정의로운 세계혁명의 열정이 고취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아프리카 내륙국들을 바다로 잇는 새로운 철도 건설을 도와달라는 니제르(Julius Kambarage Nyerere) 탄자니아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리고 소련과 친한 두 사회주의 국가 탄자니아와 잠비아를 잇는 철도 건설을 원조하기 위해 1965년 조사단을 파견한 이래 장장 5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중국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총 9억 8,800만 위안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100만 톤에 가까운 장비와 자재를 지원했다. 국가의 부름에 헌신한 중국인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약 5만 명에 달했고, 1만 6,000명에 달하는 중국 노동자가 한꺼번에 현장에 투입되었다. 64명의 중국인이 건설 및 이후 기술 협력 과정에서 숨졌다.¹¹

아울러 중국은 ‘평화공존5원칙’의 ‘내정불간섭’ 원칙을 심각히 위배하는 ‘혁명 수출’을 본격 전개하였다. 혁명수출이란 ‘세계혁명’이라는 명분 아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공산당, 무장투쟁 혁명정당 및 비밀단체에게 자금과 무기, 라디오 방송국, 군사학교 설립 등을 지원하면서 반정부 무장투쟁과 폭력혁명을 고취시킨 것이였다. 중국은 특히 접경지역에서 미군기지가 있는 곳에 적극 개입했다. 1964년 베트남의 레주언(Lê Duán,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과의 대화에서 마오는 “미국의 전쟁확대 기도를 방지하고 싶다면, 타이에서 혁명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 … 타이의 무장세력을 원조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5년, 10년 내에 타이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한다(Priscilla ed., 2006: 302).

이는 타이혁명이 베트남 전쟁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사실상 중국 국경 이남 지역에서 미국 군사기지를 억제하려는 것으로서 자신의 안보를 위

¹¹ 中國外交部, “中國援建坦贊鐵路”, https://www.mfa.gov.cn/web/ziliao_674904/wjs_674919/2159_674923/200011/t20001107_10250996.shtml(검색일: 2024. 7. 1.).

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중국 국경 이북 지역이 불안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타이, 말레이시아, 버마,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공산당이 자국 땅에서 진행하는 무력투쟁을 중국이 원조하면서 사실상 단 한 명의 자국 군인도 파병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그 지역에만 국한시킨 것으로서 ‘위험의 외주화’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외교관 양성에 장기간 종사해 온 세이셴(謝益顯) 교수는 혁명수출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자국 군인도 파병하지 않았으며 “무책임한 허풍에 불과하였고, 중국을 고립시켰다”며 ‘세계혁명’의 의미를 축소했다(謝益顯, 1995: 78). 그러나 군사안보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혁명수출’을 통해 미중 간 직접 충돌을 주변으로 외부화하고 아시아를 자신의 완충지대로 삼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이병한, 2019: 245-247).

1950-60년대 중국의 대외원조는 혁혁한 정치적 성과로 돌아왔다. 1971년 10월 25일 제26차 유엔 총회에서 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알바니아, 알제리 등 23개국이 제안한 중화인민공화국 유엔 가입 결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결의안을 제안한 알바니아와 알제리를 비롯한 23개국 중에서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22개국이 중국 원조를 받은 국가들이었다.

중국의 대외원조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소장인 저우홍(周弘)이 “서방국가의 중국에 대한 경제와 정치적 봉쇄를 타파하는 것이자,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요구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중국의 원조는 당시 강대국에 의해 획분되고, 변동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주홍(저우홍의 한국어 발음), 2015: 27-28). 이는 분명 서구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하고, 독립 이후에도 또다시 식민지배를 획책하는 서방 강대국들의 개입에 저항하는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중간지대론’과 통일전선전략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뿐 아니라 그들을 식민지배했던 영국, 프랑스, 호주 등과의 연대도 표방한 것이었다. 이는 1960년대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개도국들이 왜곡되고 불평등한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개선하고자 정치적으로는 비동맹회의, 경제적으로는 UNCTAD와 G77을 중심으로 단결하며 선진국 진영에 집단적으로 저항하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외원조 및 개도국 지원의 진의를 퇴색시킨다. 자국 경제도 어려운 데 해외를 돕는다는 불만의 목소리에 대한 팡이(方毅) 대외경제연락총국장의 발

언은 이타적인 행위 기저에 깔린 지극히 현실적인 동기를 드러낸다. “이러한 동지들은 문제를 단편적으로 본다. 국부적인 면만 보고 전체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경제적인 면만 보고 정치적인 면을 보지 못하며, 눈앞의 이익만 보고 장기적 이익을 보지 못한다”(方毅文集, 2008: 91-95, 99-104).

중국의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슬로건이 현실과 긴밀히 연관된다는 사실은 ‘내정불간섭’ 원칙의 자의적 적용에서도 나타난다. ‘내정불간섭’은 ‘평화공존5개항’의 하나일 뿐 아니라 중국이 서구와 구별되는 자국 원조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1968년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및 ‘제한주권론’, 소련의 몽골, 베트남과의 군사관계 강화 이후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소련의 핵공격 대비용 지하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을 피부로 느꼈다. 1969년 3월 중·소 국경 무력충돌 이후 중국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 이에 마오는 미국과 소련을 제1세계로, 일본, 유럽, 캐나다를 제2세계로,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제3세계로 규정한 ‘3개세계론’을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데탕트를 추진한다. 이때에도 중국은 도덕적 명분에 집착한다. 마오는 저우가 제시한 미국과의 협상 초안에 대해 “중국의 혁명 입장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기백이 전혀 없다.”라고 질타한다. “우리는 혁명을 말해야 한다. 전 세계 모든 피압박민족과 피압박인민의 해방을 말하고, 대국이 소국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魏史言, 1994: 67-69). 1972년 2월 상하이 코뮌iqué에 중국은 소련을 견준 ‘반패권’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미국과 타협한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데탕트 이후 더 이상 미국을 견준 ‘혁명수출’이 불필요해지자 중국은 반소(反蘇)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다. 이때 압둘 라작(Tun Abdul Razak) 말레이시아 총리가 마오에게 중국의 혁명수출 및 원조를 받았던 말레이시아 공산당 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자 마오는 그건 당신들의 내정이니 개입하지 않겠다고 거절한다(이병한, 2019: 250-252).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은 강대국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1978년에는 무려 74개국에게 원조했는데, 이는 미국보다 더 많았다(Deborah 1998). 마오의 유토피아적 사고와 관념,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 그리고 그에 기반한 다양한 내러티브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선명한 혁명

성을 제공하였고, 농후한 이상주의적 색채를 담보했다. 그러한 유토피아적 사고와 관념,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인류애는 서구적 관념에 실망한 일군의 서구 지식인까지 포함하여 비서구적 현대화를 갈망하는 국제사회의 지식인 계층에 매력적인 것으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의 기저에는 자신의 생존과 안보 확보에 필사적인 신생국의 매우 현실적인 동기가 근원적으로 내재해 있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자신의 눈에 가장 위협한 특정국가 및 전략적 목표에 따라 이른바 피압박민족, 신생독립국을 자기편으로 유인하고자 하였고, 특정상황에 필요한 도덕적 내러티브를 취사선택하여 활용했다. 아울러 TAZARA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가의 과도한 도덕적 이미지 구축 과정에서 자국민의 희생이 초래되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V. 주류질서에서의 순응 시기: 최고의 선(善)으로 등극한 경제성장, 그리고 개도국과의 유리(流離)

1. 대외원조의 축소와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인류에 대한 더 큰 공헌”을 위하여

문화대혁명의 참담한 실패로 중국공산당의 집권 지위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1978년 중공중앙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 채택한 것은 공산당 1당 집정의 사회주의 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혁신이었다. 덩샤오핑(鄧小平, 이하 덩)은 개혁개방의 길을 제시했지만 마오 사상 및 마오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굳건히 신봉한 자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진정한 사회주의는 생산력 해방을 실현한다는 논리 하에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一個中心, 兩個基本點]’을 제시했다. 여기서 하나의 중심은 ‘경제성장’이고 두 개의 기본점은 ‘개혁개방’과 ‘4항 기본원칙’(사회주의의 길,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공산당 영도, 맑스-레닌주의와 마오저등 사상)이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성장 추구가 중국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선(善)이자 지향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제12기 전국대표대회에서 1980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전국 농공업 GDP의 4배 증대가 중국 경제건설의 분투 목표로 공식 천

명되면서, '경제성장'은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힘껏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전파되었다(中國共產黨歷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 1982).

외교의 초점은 자연히 경제성장에 필요한 평화롭고 안정된 외부환경 조성에 두어졌다. 비록 정치보고에 “우리는 전 세계 인민과 함께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계속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라는 레토릭이 여전히 실렸지만 시대의 주제는 더 이상 ‘혁명’과 ‘전쟁’이 아닌 ‘평화’와 ‘발전’으로 새롭게 규정되었고, 경제성장이라는 구체적인 목표하에 중국에게는 자신에게 자금, 노하우, 선진기술을 제공해 줄 선진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졌다.

1982년 12월 자오즈양(趙紫陽) 총리는 아프리카 11개국 방문기간 중 비록 제3세계와의 단결과 협력이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 출발점이라 강조했다지만, “사업의 중심을 중국과 제3세계 각국 간 경제적 연계 강화로부터 ‘호혜’적인 경제·기술 협력으로 점차 옮길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중-아프리카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4대 원칙’ 즉 ‘평등 호혜, 실질적 성과, 다양한 형태, 공동 발전’을 새롭게 제시했다(Deborah, 1998: 49). 1964년 ‘8개 원칙’의 “호혜”가 중국의 제3세계 리드 및 ‘하나의 중국’에 대한 국제승인 획득을 의미했다면, 1980년 ‘4대 원칙’의 “호혜”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효율적인 투자와 관리를 학습시켜 중국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이 있었다(Correa, 2019: 537).

제3세계 개도국과 빈국에 제공된 중국의 대외원조는 비록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대외원조액은 1986년 대략 2억 2,200만 달러에서 1987년 5,000만 달러, 1998년에 2,500만 달러 수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Browne, 1990: 233). 덩은 “대외원조는 전략적 임무다. 개도국인 중국은 다른 개도국을 힘껏 원조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중국은 매우 크지만 아직 빈곤하다. 인류에 더 큰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력을 다해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4가지 현대화’를 실현하여 중국의 대외원조 수요를 적극 개혁해야 한다. 개도국 중국은 다른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서방 선진국의 자금, 기술, 지식과 경험을 빌려야 한다. 자국을 빨리 건설해야만 인류에 대해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힘으로써 대외원조 삭감을 정당화했다(鄧小平, 1993: 112).

경제성장이 최고의 선(善)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외원조에도 ‘시장의

힘'이 개입되기 시작했다. 1979년 10월 중국대외무역부는 '경제계약 관리의 약간 문제에 관한 연합통지'를 전달했는데, 이는 대외원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향후 "계약" 형식으로 원조를 진행하도록 하달한 것이다. 1980년 8월부터 투자도급제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원조 프로젝트는 더 이상 중앙의 승진부를 거치지 않고 민영기업이 주체적으로 시장원칙과 경제적 타산성을 따져 진행하는 방식이 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해외 원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기업이 되면서 중국공산당과 국영기업 간 이익이 중첩되었다. 1982년 중국은 수출입관리위원회, 외국투자관리위원회, 대외경제연락부, 대외무역부를 합병하여 대외경제무역부를 만들었고, 이 기관이 중국 대외원조를 담당하게 된다.¹² 대외원조는 '평등호혜' 원칙하에서 수원국에게도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도 수원국이 기업의 경영관리에 참여하도록 제도화되었다. 또한 수원국으로부터 받는 채무 상환금을 중국 측 지분으로 삼고 합자경영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중국 측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나갔다(주홍, 2015: 60-72). 개혁개방 시대를 맞아 '원조'는 무역, 투자와 결합되었고, 중국 기업과 중국인 노동자의 서비스를 포함한 협력모델로 발전하였다. 원조가 이타적인 지원이라기보다 투자의 대가로 이뤄지는 상호이익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환된 것이다.

2. '제3세계 저항운동'과의 유리: 서방 주도 국제기구의 최대수혜국이 되다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얻기 위해 중국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개발 원조기구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원래 중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가 미국을 포함한 패권국가들에 의해 통제된다고 여기고

¹² 개혁개방기 대외경제무역부의 기능은 "대외무역 및 경제 발전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지침과 정책을 수행·시행하고, 성, 직할시, 자치구 및 국무원 부서의 대외무역 및 경제 활동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며, 대외무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3세계 국가에 경제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 다자 및 양자 경제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외국 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기술 도입 및 수출을 조직하고, 해외 계약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노동협력,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및 대외전략을 위해 정부 간 포괄적인 대외경제 및 무역활동을 통합하고 조직한다."

멀리하다가 유엔 회원국 지위 회복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기구 — 세계보건기구, 유엔산업개발기금, 유엔개발계획, 유엔산업개발기구, 유네스코, 유엔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등에 가입했었다(주홍, 2015: 101, 112-113). 이때 미국의 금융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는 가입하지 않았었는데 개혁개방 노선 이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즉 중국은 유엔인구기금(1978), 유엔아동기금(1979), 국제농업개발기금(1980), 국제여성연구훈련원(1980), 국제부흥개발은행(1980), 국제개발협회(1980), 국제투자보증기구(1988)에 연달아 가입했다(人民網, 2015). 마지막 세 기관은 세계은행 산하기구로서 중국이 미국 금융패권의 국제경제질서에 자발적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일국일표제가 아닌 일불일표제(one-dollar-one-vote)로 운영되어 강대국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지배적인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외에도 유엔개발계획 등의 국제기구들로부터 많은 자금과 기술원조를 받았다. 1994년 기준 중국의 수혜금액은 총 32억 2,500만 달러에 달했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원국이 된다(Penny, 2007: 33).

중국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며 내기 시작한 회비(원조)는 정부가 명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기에 정확한 금액이 불분명하다. 하지만 중국학자 주홍이 정부의 비정기적 통계수치와 국제기구의 재무보고서 및 연구자들의 통계수치 등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1978년 이후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예를 들어 1986년에는 2억 2,200만 달러에 달하던 원조액이 1987년에는 5,000만 달러, 1988년에는 2,500만 달러로 대폭 줄었다(Stephen, 1990: 233). 유엔에 내는 분담금(회비)도 마찬가지다. 유엔에 가입한 1970년대에 중국의 분담금은 유엔이 규정한 분담비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1980년대부터 줄어들었다(주홍, 2015: 115-120).

사실상 이 시기는 개도국들이 상호 의존하고 서로 협력하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이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한 생산국 카르텔의 분열, 1980년대 미국의 신자유주의 성행 등으로 인해 저해되었던 시기였다. 반등정신을 계승한 신국제경제질서(NIEO)가 기존 국제정치경제질서에 대항한 도전이 G7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강대국들의 공세에 의해 점차 침식되고, 서구의 자유국제주의의 관념이 패권적 내러티브를 점차 구축하면서 지구적 보편성을 확보해 갈 때였다. 신자유주의의 쌍두마차였던 미국 레이건 행정부와 영국 대처

정부가 G7,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을 필두로 한 ‘워싱턴 컨센서스’를 만들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열망이 반영된 G77과 신국제경제질서(NIEO: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운동의 저항을 좌절시키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행태는 도덕적 관점에서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상국의 개별적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등을 통해 개도국에 강제 이식되었고 해당국의 강제적 민영화와 양극화 등을 초래했다.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가 특히 타격을 받았다(김태균, 2023: 162-183). 그러나 이 시기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금융패권에 의존하며 자신의 국부를 늘려 나갔다.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경제성장이 최고의 선(善)이자 도덕적 지향으로 간주된 이 시기에 중국의 약소국외교에서 도덕적 이상주의는 철저히 퇴락했다. 중국은 개도국들과 스스로를 유리시켰고, ‘인류에 대한 더 큰 공헌을 위한 미래 기약’이라는 명분은 공허했다. 반면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매진한 수많은 중국인들의 분투로 인하여 집정지위와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고사 직전의 위기에 봉착했던 사회주의 체제 또한 자본을 품은 중국 ‘특색’사회주의로 변모하여 생명력을 갖춰 나갔다.

V. 주류질서와의 긴장 시기: 중국식 신국제질서 모색과 개도국 외교의 진화

1. 성찰의 시기 약자에 대한 재접근

1980년대 말 천안문사태와 소련의 해체는 개혁개방 이후 서방의 신자유주의 물결에 올라타 경제성장에 여념이 없던 중국에게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 미국과 서방의 중국제재와 ‘중국위협론’의 대두, ‘역사의 종언’류의 자유민주주의 승리 담론의 성행 등은 중국의 국가정체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Fukuyama, 1992).

이 시기 중국은 제3세계에 다시 접근한다. 1992년 비동맹운동(NAM: Non

Alignment Movement) 연대 회의체에 옵서버 국가로 가입한다. 중국 관방은 자신이 '비동맹주의'를 주창한 반동회의의 주역이고 제3세계의 비동맹주의를 적극 지지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중국은 1990년대 초까지 NAM의 회원국이 아니었다. 중국이 1950년 소련과 맺은 중소동맹 유효기한이 30년이었고, 또한 1961년 북한과 맺은 북중동맹은 정기적으로 자동연장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은 비동맹국가가 아니었다. 1980년 소련과의 안보동맹 관계가 종료되지만 위기감이 심화된 1992년에야 비로소 중국은 비동맹운동의 옵서버 국가로 참여한다.

1991년 중국 외교부장은 새해 첫 방문지로 아프리카를 선택했다.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1996년 아프리카 순방시 미래지향적 중국-아프리카 관계에 대한 5가지 건의 — '진정한 우호 및 상호 신뢰', '평등 대우와 상호 주권 존중 및 내정불간섭', '호혜 및 공동발전 도모', '협상 강화 및 국제 협력', '미래를 향해 더 나은 세계 창조' — 를 제시했다(中國外交部, 2000). 가장 앞에 있던 “호혜”가 내려가고 그 자리를 ‘진정한 우호’가 채웠다. 이후 2000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이 출범하고 2006년에 정상급으로 격상된다. 이와 같은 중국의 아프리카 중시는 서구의 중국위협론 유행기를 맞아 중국이 일국일표제의 유엔에서 수적으로 다수를 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을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성장 지속에 필요한 아프리카 자원의 안정적 확보 또한 주요 동기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본래 정치적 색채가 강했던 중국의 대외원조에 비즈니스적 성격이 더욱 가미되었다는 것이다. 대외원조를 담당하던 대외경제무역부는 1993년 대외무역경제협력부로 개명된다.¹³ 1995년 중국의 양자 대외원조 업무에 일정한 조정이 가해진다. 첫째, 양허성 차관이 개시되었다. 이는 중국과 프로

13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經濟合作부가 맡은 대외원조 부분: “중국의 대외원조를 자체 책임 하에 관리하고, 대외원조 정책, 규정, 제도 및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며,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연간 원조계획의 이행을 준비하고 조직하며, 대외원조 프로젝트의 이행을 감독 및 검사하고, 대외원조 자금, 특별대출, 특별자금 등을 관리하며, 대외원조 제공방식의 개혁을 수행합니다.” <https://baike.baidu.com/item/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2878792>(검색일: 2023. 11. 6.). 2003년에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구 국가계획위원회 및 구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일부 기능 부서 및 국을 통합하여 상무부 설립했고, 상무부가 중국 대외원조 업무 지속 담당하게 된다.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百科, https://baike.baidu.com/item/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11017837?fr=ge_ala(검색일: 2023. 11. 6.)

젝트 계약 시 중국정부가 대출 이자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수원국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둘째, 공동출자와 공동협력[合資合作]이라는 원칙 하에 중국기업과 수원국 기업이 합자경영이나 공동경영, 또는 중국기업 단독 자본 방식으로 중국의 대외원조 프로젝트를 시행하게끔 제도화하였다. 주홍에 따르면, 양허성 차관은 시장 법칙에 따라 발전가능성 있는 에너지, 가령 교통, 정보 등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1,000만 달러 이상)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투자였다. 수원국은 양허성 차관을 빌려 중국 설비와 재료 — 대형 동력전기 설비제품, 비행기, 컨테이너 검측 설비, 전신 설비 등 — 를 구매하고, 중국기술자를 초빙하며, 수원국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현지 비용으로 사용했다(주홍, 2015: 105-110). 이로써 중국 자금으로 중국 기자재를 사고, 중국 인부를 쓰며, 운영도 상당 기간 중국인이 맡아서 자금이 다시 중국으로 흘러가는 오늘날 구조의 초기형태가 마련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환언하면, 초기의 대외원조는 정치적 고려를 강하게 반영했지만 개혁개방을 거치며 경제적 고려가 개입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즈니스적 성격이 더욱 가미되면서, ‘강한 정치적 의도’와 ‘비즈니스적 형태’라는 상호 모순되고 이중적인 성격이 동시에 공존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2. 중국의 이상주의적 신국제질서 모색과 개도국외교의 계층적 분화

1) 유가사상과 결합한 중국의 도덕정치의 재활성화

서구와의 긴장이 높아진 1990년대에 중국 학계와 사상계에서는 그동안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지나치게 서구적이었다는 성찰과 함께 도덕적 이미지에 대한 재탐색이 시작되었다. 학문의 본토화, 즉 중국의 우수한 옛것 — 5천 년이 넘는 역사 속의 다양한 문화자산, 가령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사상, 도가사상,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유교사상의 전통을 재발굴하여 중국이 당면한 현실을 개선시키고, 중국이 지향하는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미래 세계를 모색하려는 학문적 움직임이 개시된 것이다.¹⁴ 관방이 이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대외원조를 비롯한

¹⁴ 대표적으로 자오칭양의 ‘천하세계론,’ 친야칭의 ‘중국특색의 국제정치이론’ 개발 시도, 옌쉐통의

개도국외교가 보다 이상적인 수사로 포장되며 다변화된다.

특히 동아시아금융위기는 중국의 도덕정치 활성화를 촉진시켰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은 인민폐 평가절하를 자제했는데, 이로써 위기에 빠진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위기극복에 도움 받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주변국의 찬사가 당면한 서구의 중국위협론 대처 및 안보에 유용함을 깨달은 중국 학계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朱鋒, 1998a, 1998b).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면 경제력,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뿐 아니라 우수한 문화와 도덕적 이미지,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담론력 같은 소프트파워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국적 개념을 모색하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장저민 주석은 '법치와 덕치' 담화를 통해 '덕치론'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이인위본(以人爲本·국민을 근본으로 삼음)'을 제시했다. 대외적으로도 '평화부상론(和平崛起論)', '조화세계론(和諧世界論)', '책임 있는 강대국(負責任的大國)' 등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수사가 2000년 이후 연이어 제시되었다.

아울러 신국제질서에 대한 중국 관방의 공식 언술도 풍부해졌다. 1997년의 제15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신국제질서 관련 서술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국제정치경제질서를 수립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국제질서는 평화공존5원칙을 기초로 하며, 유엔헌장의 대의와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평화와 발전의 시대 조류를 반영합니다."의 원론적인 문장에 그치지만, 2002년 16차의 경우 내용이 풍부해졌다.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국제정치경제질서 확립을 주장한다. 각국은 정치적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함께 협상해야 하며, 자신의 의지를 남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 경제적으로는 상호 촉진시키고 공동발전 해야하며, 빈부차를 조성해선 안된다. 문화적으로 서로 배우고, 공동번영 해야지 다른 민족의 문화를 배척해선 안 된다. 안보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함께 지키며,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과 협력의 신안보관을 수립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지, 무력에 호소하거나 무력으로 서로 위협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한다.

'도덕적 현실주의'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다.

중국은 영원히 패권국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확장하지 않을 것이다(中國共產黨 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02).

2) 대외원조의 확대: “책임 있는 개도강대국[負責任的發展中大國]”

2005년 중국은 ‘조화세계론’ 제기와 함께 신발전관, 신안보관, 신문명관 등, 국가와 국가 간 평화, 인간 간 화목, 인간과 자연 간 조화를 강조하는 담론을 풍성하게 제시한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05). 대외원조에도 국제 급변사태와 자연재해 발발에 대비하는 응급지원 시스템이 마련되기 시작했고, ‘이인위본’의 정신 아래, 인프라 개발 외에 인간의 발전능력 제고도 강조되기 시작했다. 수원국 인민에 대한 봉사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주홍, 2015: 77-83).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회담에서 “서로 다른 문명 간 우호적 접촉을 추진하고, 평등하게 대화하며, 발전과 번영을 통해 조화세계를 함께 건설하자”고 제창했다(中國社會科學網, 2018). 또한 5개월 후 유엔총회 세계정상회의 재정지원 고위급 회의에서 ‘보편적 발전 추진과 공동번영 실현’ 연설을 통해 “국제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빈국과 부국 간 격차를 축소하여 새천년 개발 목표를 실현하자”는 주장과 함께 대외원조의 다섯 가지 조치 — 후진국들이 수출하는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빈곤국과 최빈국에 대한 원조 확대 및 차관 탕감, 개도국에 특혜차관과 특혜 신용대출 제공,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원조 증대, 개도국 인재 양성 지원 — 와 네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¹⁵ 이에 따라 2004년 3억 1,700만 달러였던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는 2005년 3억 9,200만 달러, 2006년 5억 1,900만 달러로 급성장했다. 후주석은 다음해 열린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정상회의에서도 2009년까지 2006년의 두 배

¹⁵ 이는 첫째, 개혁을 더욱 심화하여 국제경제 체제와 규칙을 더욱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자. 특히 개도국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경제적 지구화는 균형적이고 보편적인 특혜와 이익을 함께 얻는 방향으로 발전시키자. 둘째, 발전유형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발전경험의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자국 실정에 맞는 발전 루트와 유형을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각국의 발전 실현에 있어서 관건이다. 셋째,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새천년 개발목표의 진행과정 평가제도를 구축하여 각국의 진행과정을 신속히 평가하자. 넷째, 국제개발 협력에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제안이었다. 中央政府網, “胡錦濤在聯合國宣布中國支持發展中國家五大舉措”, 2005年 9月 15日, https://www.gov.cn/ldhd/2005-09/15/content_63526.htm(검색일: 2024. 3. 3.).

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Weeks and Li, 2008: 25-26).

2007~2008년 미국 발 지구적 금융위기는 중국의 자신감을 일깨웠다.¹⁶ 당시 국민소득의 약 27% 정도로 추정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해 중국은 세계경제가 부채에 의존하여 미약하게나마 회복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Wong, 2011). 2008년 9월 원자바오(溫家保) 총리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고위급회의'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개도 강대국(負責任的發展中大國)'으로서 부유하진 않지만 세계 최빈국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헌해 왔다고 발언했다. 또한 선진국이 저개발국을 책임지고 원조해야 하며 원조에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아야 한다면서, 공여국들은 향후 5년 동안 세계식량 계획에 대한 기부금을 두 배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또한 유엔 '새천년선언'의 목표를 위한 업무 메커니즘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中央政府門戶網站, 2008). 다음 달 중국은 상무부, 외교부, 재정부를 주요 책임자로 하는 24개 중앙부서와 기구에 '대외원조 부서 간 연락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원조외교를 위한 부서 간 소통을 강화했다. 2년 후 같은 자리에서 중국은 더욱 진전된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개도국의 민생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200개 학교 추가 건설 및 3,000명의 의료전문가 파견, 5,000명의 의료인력 양성 지원, 둘째, 2010년 만기 도래 국가들의 무이자 정부 대출 추가 탕감, 셋째, 개도국의 국제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에 100억 달러, 아세안 국가에 150억 달러 우선대출 제공 및 국제통화기금(IMF) 자본금 500억 달러 증액, 넷째, 2010년 7월 이후 33개 최빈개도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4,700개 이상의 관세품목에 대한 무관세 대우 부여, 그리고 개도국과의 농업협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00명의 농업 전문가와 기술자 추가 파견 등을 골자로 하는 약속을 제시하였다(中國外交部, 2010).

국제기구를 통한 대외원조액도 확대시켰다. 중국이 국제기구를 통해 원조를 제공한 것은 1971년 유엔 회원국 지위 회복 이후 유엔 산하 기구의 회원국이 되면서부터였다. 1973년에 처음으로 유엔개발계획, 유엔산업개발기구와 유엔자본

¹⁶ 금융위기 이후 개최된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에서 “세 가지 자신감” 즉 노선에 대한 자신감(道路自信), 이론에 대한 자신감(理論自信), 그리고 제도에 대한 자신감(制度自信) 개념이 제기되었다.

개발기금에 기부했지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대외원조액이 감소했고, 1990년까지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는데,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한 것이다. 2006년 중국은 유엔개발계획,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하여 중국국제빈곤퇴치센터를 설립하고 국제사회의 빈국,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빈곤 퇴치에 앞장섰다. 또한 자신이 1980년부터 1999년까지 발전기금을 받았던 IDA에 2007년부터 기부하기 시작했다. 나이지리아의 한 보도에 따르면, 1995년에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액은 2005년 47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嚴海蓉·沙伯力, 2017: 59). 주홍에 따르면 2004년부터 타국에 주는 원조가 중국이 받는 원조를 앞질렀다.

이처럼 중국은 약소국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데 앞장서면서 미국 및 서방 국가들보다 더욱 도덕적인 자신의 모습을 시현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소련이 해체되어 사회주의세력이 쇠퇴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원래 도덕과 이타성을 중시했던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되찾으며, 비서방 국가들의 인정 및 지지를 받아 서방의 견제에 대응하려는 중국의 도덕정치가 국제사회에서 부활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덕정치는 결국 목적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외원조가 수원국으로부터의 원활한 자원 획득 보장을 꾀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지 않다. 중국이 제공하는 무상원조, 무이자 대출, 양허성 대출 중에서 무이자 대출은 중국에게 20년의 소유권을 제공하며 5년 사용, 5년 유예, 10년 상환의 방식이다. 양허성 대출의 경우 국가보조금 덕에 연 2~3%의 저금리이지만, 투자된 자금의 최소 50%가 중국 건설회사의 자재 및 전문지식 획득에 사용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출은 수원국의 주권을 사실상 제약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경제가 뒤쳐진 국가들과의 ‘자원 장기공급 계약’을 담보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Alves, 2013).

대외원조의 확대와 함께 추진된 정부의 “주출거(走出去)” 방침에 따라 중국의 자본은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 자원 및 시장을 향해 더욱 활발히 나아갔다. 개혁개방 이후 쌓인 막대한 자본은 서방의 ‘워싱턴 컨센서스’를 타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로 뻗어 나갔다. 중국은 신자유주의의 지구화에 참여하면서 명실공히 국제사회의 기득권자가 되었다(嚴海蓉·沙伯力, 2017: 16).

3) 다자외교 활성화와 개도국 리더 지위 추구

이 시기 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비서방국가를 대상으로 다자외교를 적극 추진시켰다. 1996년 중국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상하이에서 안보조약을 맺으며 탄생한 상하이 5국(Shanghai Five)은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로 승격된다. 2000년에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을 출범시키고, 2003년 새로운 아프리카 전략을 발표했으며, 2004년 중국-아랍국가 협력포럼도 설립했다. 그리고 2006년 FOCAC를 정상급회의로 격상시키고 2006년을 '아프리카의 해'로 정했다. 이 외에도 2004년 4월 하이난에서 보아오포럼(BFA: Boao Forum for Asia)을 개최하여 아시아지역협력 강화 5개항 — 선린우호와 정치적 상호신뢰 증진, 쌍무적 경제협력 전개 및 심화, 경제통합 과정의 가속화, 문화교류와 인적왕래 촉진, 안보대화화 군사교류 증진 — 을 제시하였다. 2006년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즉 개도국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한 개도강국들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고, 2009년 첫 정상회담 개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초대하여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며 명실공히 BRICS를 탄생시켰다.

이 외에 중국은 국제기구와의 다자적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했다. 상무부 산하 '중국 국제경제기술교류센터(CICETE: China International Center for Economic and Technical Exchange)'는 개도국의 경제와 사회 개발을 위한 기술원조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실크로드 지역 프로그램(Silk Road Regional Programme)', '중국 신실크로드(2단계)(Chinese New Silk Road(Phase II))', 대(大)투먼 이니셔티브, 21세기 SSC 촉진(TCDC II), 중국-아프리카 비즈니스 협의회 등을 실행함으로써 중국의 전통유산을 부각시키고 개도국 리더로서의 위상을 닦아 나갔다. '유엔개발협력 중국사무처(UNDP/CO)'는 개도국 개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여를 더욱 끌어내고, 개도국 리더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형성하고자 했으며(Weeks and Li, 2008), 이는 중국의 의도와도 부합했다. CICETE가 실행한 '실크로드 지역 프로그램'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2005~2007)였고, '중국 신실크로드(2단계)'는 중국의 실크로드 연선 성(省)의 역량 강화와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한 프로젝트(2004~2008)였다. 중국은 UNDP/CO 전국 'Silkroad Initiative'에 의해 조직된 '신실크로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 및

적극 참여하며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지역 개발과 연계를 추진하였다.¹⁷

이는 UNDP와 중국, 중앙아시아 4개국, 러시아, 이란, 터키 등 19개국 교통부 장관 및 고위 관리들이 참여하는 실크로드 복원 프로그램으로 확장된다. 이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30억 달러를 투자하여 고대 실크로드 및 다른 고대 유라시아 대륙 회랑을 되살리기 위한 2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었다(蔣洪新·尹飛舟, 2023). 그리고 이와 같은 수많은 중국의 다자주의 노력과 지역개발 프로젝트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가치를 전면에 내건 시진핑 집권기에 이르러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지극히 이상적인 수사와 함께 아시아-아프리카, 더 나아가 유럽까지 연계하려는 담대한 전략, 즉 ‘일대일로’로 화려하게 국제사회에 등장하였다.

VI. 결론: 약소국 외교의 장기역사적 맥락에서 본 ‘일대일로’

주류질서에서의 도전 시기 중국은 중국역사상 가장 선명한 이상주의적 색채와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 그리고 유토피아적 관념을 표방했다. 이는 자기중심적 중화질서를 상실한 중국이 오랜 사회적 혼란과 내전을 겪은 후 새로운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일어서기 위한 투쟁이자 도덕정치 대외적 발현이었다. 이는 극도로 자기 중심적인 정체성과 세계관에 기반한 중국의 현실주의적 면모를 분출시켰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당시 최강대국과의 마찰 속에서 안보를 보장받고자 중국은 약소국들을 자의적으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도덕적 수사를 동원했으며 이는 국익에 따라 언제든지 취사선택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 시기는 또한 제한된 자원과 역량의 중국이 수많은 제3세계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비현실적 행태를 보

¹⁷ 2005년 ‘유엔 실크로드 도시상(賞) 계획이 발표되자, 다음해 9월 중국의 여러 부처 및 위원회로 구성된 ‘신유라시아 대륙교 국제조정기구(ICNASEB)’는 연선 지역들이 공모하도록 장려하였다. 中國新聞網, “聯合國新絲綢之路明珠城市(中國)評選活動將啟動”, 2006.9.1. <https://www.chinanews.com.cn/other/news/2006/09-01/783416.shtml>(검색일: 2023. 12. 15.).

인 기간이기도 했다. 국가의 숭고한 이상과 명분에 호응한 중국인들의 희생도 초래되었다. 서구 식민지에서 독립한 수많은 국가와 민족들은 중국의 도덕성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된 동시에, 각종 원조와 정치적 지지의 수혜자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가건립 초기 중국외교의 도덕정치에서는 도덕의 수단화가 기승을 부렸고, 극단적 현실주의와 비현실적 이상주의가 혼재되어 펼쳐졌다.

이에 비해 주류질서에 순응한 개혁개방 시기 중국 외교의 도덕정치는 국제사회에서 사라지고 중국 외교의 이상주의는 철저히 쇠락했다.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의 연이은 실패로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국 사회주의는 '경제성장'을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善)이자 도덕으로 설정했고 자본과 시장을 활용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변모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편입한 중국은 반제국주의 및 비동맹운동을 지속하는 약소국들과 멀어졌을 뿐 아니라 그들을 억누르는 서방의 금융패권에 기대어 부(富)를 채워 나갔다. "인류에 대한 더 큰 공헌" 명분은 초라했다. 반면 공산당 일당체제는 유지될 수 있었고 집정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후 소련의 붕괴, 서방의 '중국위협론'에 직면한 중국이 성찰과 함께 자신의 길을 모색하면서 도덕정치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재발현되었다. 자국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신국제질서, 가장 자신의 모습에 부합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미래질서의 상(像)을 고민하고 제시하기 시작했고 약자에 대한 접근도 강화했다. 자국의 평화적 부상 및 조화로운 세계관 등의 강조는 미국 중심 서방 주류세력의 중국 견제에 대한 방어적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은 도덕적 수사 및 이상적 내러티브를 동원하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다자외교를 적극 추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방 중심 국제질서에서 스스로를 개도국의 리더로 다시 추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자신감 강화와 함께 더욱 활발해졌다. 즉 이 시기 중국외교에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함께 발현되는 모습이었다.

'일대일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생했다. 그것도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의 최고의 선(善)이자 궁극적 지향점이었던 '경제발전'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

흥'으로 대치되면서 나타났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서구의 냉전적 사고방식 및 전통과는 구별되는 '중국 특색 강대국외교(中國特色大國外交)'를 전개하겠다고 공언했고, '일대일로'를 대표적 프로젝트로 등장시켰다. 과거 서방 선진국에 대한 외교를 뜻하던 강대국외교, 즉 '대국외교(大國外交)'의 개념은 이제 강대국이 된 자신이 타자에게 행하는 외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인류운명공동체'를 비롯한 이상주의적 내러티브는 더욱 강해졌다. 일대일로의 대상 또한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잇는 역대급 규모이다. 시진핑 2기 정부는 일대일로 범위를 북극,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안 지역까지 확장시켰을 뿐 아니라,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각 개도국과 빈곤국들의 보건의 질을 높이는 보건실크로드(Health Silkroad),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해 개도국과 빈곤국들의 스마트 도시화를 표방하는 디지털실크로드(Digital silkroad)로 확대 및 진화시키고 있다. 시진핑 3기 정부는 비록 서방의 "빚 트랙(Debt track)" 공세와 수익구조 악화에 직면하여 "작고 아름다운(小而美)"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일대일로를 이른바 '인류운명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일대일로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한 중국외교의 도덕정치에서 앞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전개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존 강대국 중심 국제질서를 개혁하고 신국제질서를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국제사회의 비주류 세력들에 대한 정책과 수사를 시기별로 취사선택해 왔다. 원조는 이를 위한 물질적 도구였으며, 수반되는 다양한 이상주의적 내러티브는 그를 가능케 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장치이자 도구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일대일로'가 제시하는 장밋빛 전망만을 바라볼 수 없다. 이제는 상당한 기득권 세력이 되어 버린 중국이 '일대일로'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3차 일대일로국제포럼 개막식에서 시주석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서로 연결되며, 공동 발전하는 세계를 건설하자 [建設開放包容, 互聯互通, 共同發展的世界]고 역설했다. 시 주석과 각국 참가자들이 회의장에 입장할 때 '평화-운명공동체(和平-命運共同體)' 노래가 울려 퍼졌다(第三屆“一帶一路”國際合作高峰論壇官方網站, 2023). 과거 1960년대 중국의 "호혜" 담론이 중국의 제3세계 리더 및 '하나의 중국'에 대한 국제승인 획득을 추구하고, 1980년대 "호혜" 담론이 자국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이 있었다면, 오늘날 "호혜" 즉 이익

의 조화, 공동이익의 강조는 기득권 중국의 이익을 지켜 나가기 위한 강자의 슬로건이 된 것은 아닐까? 제로코비드 정책의 중국적 실패 및 중국 경기 하강국면을 맞아 '일대일로'는 이윤이 낮은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정리하고 실질적 성과에 주력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수많은 빈국, 개도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입장과 이익은 어떻게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시화된 미국의 중국 견제가 향후 지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전략경쟁 국면 속에서 수많은 개도국과 빈국, 신흥국들은 부지불식간에 중국에 의하여 서방의 중국 견제를 뚫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위치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중국은 '미국 대외원조의 위선적 본질과 사실의 진상[美國對外援助的偽善本質和事實真相] 보고서(2024)를 발행하며 미국의 도덕성을 비난하기 시작했다(中國外交部, 2024). 미국 또한 중국의 권위주의 속성을 부각시키며 민주 대 권위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틀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제시하며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강대국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국제질서를 강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24년 6월 7일 | 심사일: 2024년 7월 2일 | 게재확정일: 2024년 7월 31일

참고문헌

- 카아(Carr, E. H.) 지음. 김태현 옮김. 2023. 『20년의 위기』. 서울: 녹문당.
- 김태균. 2023. 『반동 이후』. 서울: 진인진.
- 필한, 쿨하우스 지음. 윤형진 옮김. 2023. 『현대중국의 탄생』. 서울: 너머북스.
- 민주주의수호재단. 2023. “지도로 본 중국의 글로벌 군사 족적 확대,” 2023. 9. 2.
- 謝益顯. 정재남 옮김. 1995. 『신중국 외교이론과 원칙』. 서울: 아세아문화사.
- 서정경·원동욱. 2019.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대국 외교와 미중 무역분쟁.” 『국가전략』 25(1), 33-62.
- 원동욱. 2024.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중국의 대응: 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7(4), 79-117.

- 이병한. 2019. 『붉은 아시아』. 서울: 서해문집.
- 주홍 지음. 김일산 외 옮김. 2015. 『중국 대외원조 60년』. 서울: 푸른세상.
- 진리군 지음. 연광석 옮김. 2012.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上)』. 서울: 한울아카데미.
- 嚴海蓉·沙伯力. 2017. 『中國在非洲: 話語與現實』.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師哲. 1991. 『在歷史巨人身邊』. 中央文獻出版社.
- 方毅文集編輯組 編. 2008. 『方毅文集』. 人民出版社.
- 鄧小平. 1993. 『鄧小平文選』 第2卷. 人民出版社.
- 魏史言. 1994. “基辛格第二次訪華.” 外交部外交史編輯室 編. 『新中國外交風雲』 2. 世界知識出版社.
- 閻學通. 2015. 『世界權力的轉移: 政治領導與戰略競爭』. 北京大學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60. “和美國記者安娜·路易斯·斯特朗的談話(1946.8.6).” 『毛澤東選集』 第4卷. 人民出版社.
- _____. 1996. 『劉少奇年譜 1898-1969』. 中央文獻出版社.
- _____. 1999. “同一切願意和平的國家合作(1954.7.7).” 『毛澤東文集』 第6卷. 人民出版社.
- 朱鋒. 1998a. “論區域主義與東亞安全.” 『國際政治研究』 2月 25日.
- _____. 1998b. “區域合作與東亞安全保障的前提.” 『國際經濟評論』 6月 15日.
- 中國外交部. 1955. “參加亞非會議的方案(草案)(1955.4.4.~4.5).” 外交部開放檔案 207-00004-01.
- 閻學通. 2014. “道義現實主義的國際關係理論.” 『國際問題研究』 第5期.
- Amitav, Acharya. 2019. “From Heaven to Earth: ‘Cultural Idealism’ and ‘Moral Realism’ as Chinese Contributions to 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2(4), 467-494.
- Amitav, Acharya. and Barry Buzan. 2010. “Why Is There No Non-We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 Introduction.” *Non-We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erspectives on and Beyond Asia*, 11-35. New York, NY: Routledge.
- Alves, Ana Cristina. 2013. “China’s ‘win-win’ Cooperation: Unpacking the Impact of Infrastructure-for-resources Deals in Africa.” *South Af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2), 207-226.
- Amar, Bhattacharya et al. 2019. “China’s Belt and Road: The New Geopolitics of

- Glob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A Brookings Interview*. Brookings.
- Babik, Milan. 2013. “Realism as Critical Theory: The International Thought of E. H. Carr.”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5(4), 491-514.
- Browne, Stephen. 1990. *Foreign Aid in Practice*. New York University Press.
- Corrêa, V. Victor. 2019. “From Third World Theory to Belt and Road Initiative: International Aid as a Chinese Foreign Policy Tool.” *Contexto Internacional* 41(3), 529-551.
- Bräutigam, Deborah. 2011. *The Dragon’s Gift: The Real Story of China in Af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ukuyama, Francis.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The Free Press.
- Li, Sheng. 2021.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s New Role in Geopolitics and Security Issue.” in sheng Li and felix Dmitri do nascimento, e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South–South Cooperation*. Palgrave Macmillan.
- Lowell, Dittmer and Samuel S. Kim, eds. 2018. *China’s Quest for National Identity*. Cornell University Press.
- McBride, James, Noah Berman, and Andrew Chatzky. 2023. “China’s Massive Belt and Road Initiativ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
- Penny, Davies. 2007. *China and the End of Poverty in Africa: Towards Mutual Benefit?* Sundbyberg, Sweden: Diakonia.
- Priscilla, Roberts, ed. 2006. *Behind the Bamboo Curtain: China, Vietnam, and the World beyond As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ye, W. Lucian and Mary W. Pye. 1985. *Asian Power And Politics: The Cultural Dimensions of Authority*. Cambridge, Massachusett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Roberts, Priscilla M. 2006. *Behind the Bamboo Curtain: China, Vietnam, and the World beyond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hih, Chih-yu. 1993. *China’s Just World: The Morality of Chinese Foreign Policy*. Boulder: Lynne Rienner.
- Weeks, John and Ronglin Li. 2008. *Outcome Evaluation on Partnerships (Global Partnerships Promoted for Effective Results)*. UNDP China, Final Report, August.
- Wong, Christine. 2011. “The Fiscal Stimulus Programme and Public Governance

Issues in China.” *OECD Journal on Budgeting* 11(3), 1-22.

Yu, George T. 1977. “China’s Role in Africa.”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32 (1), 96-109.

〈인터넷 자료〉

中國外交部. 2000. “江澤民主席非洲六國之行.” 2000. 11. 7. https://www.fmprc.gov.cn/web/ziliao_674904/wjs_674919/2159_674923/200011/t20001107_10251015.shtml(검색일: 2023. 5. 1.).

_____. 2010. “溫家寶在聯合國千年發展目標高級特別會議上的講話.” 2010. 9. 23. https://www.mfa.gov.cn/web/zyxw/201009/t20100923_309786.shtml(검색일: 2023. 10. 9.).

_____. “中國援建坦贊鐵路.” (날짜 미기재). https://www.mfa.gov.cn/web/ziliao_674904/wjs_674919/2159_674923/200011/t20001107_10250996.shtml(검색일: 2024. 7. 1.).

_____. 2024. “美國對外援助的偽善本質和事實真相.” 2024. 4. 20. https://www.mfa.gov.cn/wjbxw_new/202404/t20240419_11284707.shtml(검색일: 2024. 5. 20.).

中國人民外交學會. 2016. “有關國際秩序的認知.” 『外交』 115期. <https://www.cpifa.org/cms/book/11>(검색일: 2024. 5. 1.).

中國新聞網, “聯合國新絲綢之路明珠城市(中國)評選活動將啟動.” 2006. 9. 1. <https://www.chinanews.com.cn/other/news/2006/09-01/783416.shtml>(검색일: 2023. 12. 15.).

蔣洪新·尹飛舟. 2023. “一帶一路與世界智慧.” 中國社會科學網. 2023. 10. 23. https://www.cssn.cn/zkzg/zkzg_gxzkdyx/zkzg_gxdzyx_yc/202310/t20231023_5692349.shtml(검색일: 2024. 3. 9.).

中央政府門戶網站. 2008. “溫家寶在聯合國千年發展目標高級別會上講話全文.” 2008/09/26. https://www.gov.cn/ldhd/2008-09/26/content_1106073.htm(검색일: 2024. 2. 10.).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05. 『“中國的和平發展道路”白皮書』. 2005. 12. https://www.gov.cn/xwfb/2005-12/22/content_133974.htm(검색일: 2024. 1. 20.).

中央政府網. 2005. “胡錦濤在聯合國宣布中國支持發展中國家五大舉措.” 2005. 9. 15. https://www.gov.cn/ldhd/2005-09/15/content_63526.htm(검색일: 2024. 3.

3.).

- 中國社會科學網. 2018. “首提‘和諧世界’理念.” 2018. 12. 29.(검색일: 2023. 1. 28.)
- 第三屆“一帶一路”國際合作高峰論壇官方網站. 2023. “習近平出席第三屆‘一帶一路’國際合作高峰論壇開幕式並發表主旨演講.” 2023/10/18. <http://www.beltandroadforum.org/n101/2023/1018/c132-1190.html>(검색일: 2024. 2. 19.)
- 人民網. 2015. “國際經濟新秩序的中國戰略.” 2015. 2. 9. swj.ningbo.gov.cn/art/2015/2/9/art_1229031551_47415923.html(검색일: 2022. 5. 9.).
- 中國共產黨歷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 1982. “全面開創社會主義現代化建設的新局面: 胡耀邦在中國共產黨第十二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1982. 9. 8.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5/65448/4526430.html>(검색일: 2024. 1. 2.).
- _____. 2002. “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 2002. 11. 8. <http://cpc.people.com.cn/BIG5/64162/64168/64569/65444/4429125.html>(검색일: 2015. 9. 16.).

바이두 홈페이지

- <https://baike.baidu.com/item/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2878792>(검색일: 2023. 11. 6.).
- https://baike.baidu.com/item/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11017837?fr=ge_ala(검색일: 2023. 11. 6.).
- <http://baike.baidu.com/item/國際新秩序/5599105?fr=aladdin>(검색일: 2024. 7. 15.).
- https://baike.baidu.com/item/%E5%BC%BA%E6%9D%83%E6%94%BF%E6%B2%BB?fromModule=lemma_search-box(검색일: 2024. 7. 15.).
- https://baike.baidu.com/item/%E9%9C%B8%E6%9D%83%E4%B8%BB%E4%B9%89?fromModule=lemma_search-box(검색일: 2024. 7. 15.).
- Delia Lin. 2019. “Morality Politics under Xi Jinping” East Asia Forum, 1 August. <https://eastasiaforum.org/2019/08/01/morality-politics-under-xi-jinping/>(검색일: 2023. 8. 20.).
- John Mearsheimer vs. Yan Xuetong: Can China Rise Peacefully?, <https://www.youtube.com/watch?v=xokkGnBOgiU>(검색일: 2023. 9. 20.).
- “強權政治是指一種以強權關係維持國際秩序的資產階級國際政治.” <https://baike.baidu.com/item/%E5%BC%BA%E6%9D%83%E6%94%BF%E6%B2%BB/2134095?fr=>

ge_ala(검색일: 2024. 7. 15.).

“霸權主義(hegemonism)是指大國、強國、富國欺侮、壓迫、支配、干涉和顛覆小國、弱國、窮國，不尊重他國的獨立和主權，進行強行的控制和統治。” https://baike.baidu.com/item/%E9%9C%B8%E6%9D%83%E4%B8%BB%E4%B9%89?fromModule=lemma_search-box(검색일: 2024. 7. 15.).

“國際舊秩序是在廣大發展中國家處於無權地位的情況下，由少數大國按照發達國家的意願和利益建立起來的。戰後一直延續到現在還沒有根本改變。國際舊秩序以霸權主義、強權政治和剝削掠奪為基本特征。它包括國際政治舊秩序和國際經濟舊秩序。國際政治舊秩序的具體表現是：在國際關係中以大欺小、以強凌弱、以富壓貧，大國、強國依仗優勢的經濟軍事實力，推行“炮艦政策”，無視國際法和國際關係基本準則，干涉別國內政，踐踏他國主權，追求控制、支配其他國家的權力。它的實質是維護超級大國的霸權地位。” https://baike.baidu.com/item/%E5%9B%BD%E9%99%85%E6%96%B0%E7%A7%A9%E5%BA%8F?fromModule=lemma_search-box(검색일: 2024. 7. 15.).

Abstrac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from the Historical Context of China's Diplomacy Towards Weaker Nations: The Fusion of Idealism and Realism in China's Pursuit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Jeong Kyung Se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nsider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launched in 2013, as a resistance to the Western-centric mainstream order and traces the long-term historical context of China's diplomacy towards weaker nations, which has been closely related to its pursuit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Assuming that Confucian thought has consistently projected 'moral politics' emphasizing morality, power, and recognition onto Chinese diplomacy, the study analyzes China's diplomacy towards weaker nations from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o the period before the launch of the BRI, dividing it into periods of challenge, compliance, and tension with the mainstream order. This analysis interprets the intricate interplay and periodic changes between idealism and realism inherent in China's diplomacy towards weaker nations and offers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BRI, which has emerged as a key example of moral diplomacy.

Keywords |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Moral Politics, Diplomacy Toward Weaker Nations, China's Pursuit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Fusion of Idealism and Realism

